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술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슴 타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993년 2월 25일, YS가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행한 취임 연설의 한 부분이다. 11월 22일은 YS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3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 3주기에 즈음하여 YS에 얽힌 이런저런 추억을 떠올려 보니 그가 이 나라 민주주의에 남긴 업적이 새롭다. 아마도 1993년 8월 10일 무렵이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그때가 나의 여름 휴가 기간이었지만, 한가롭게 휴가를 떠나기가 무엇해서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올라오라는 호출이 왔다. 내용인 즉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실시하려 하는데, 실무진이

YS, 그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추억

작성한 담화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 써 오라는 것이었는데 사안이 엄중하다 보니 이 작업은 관계 장관과 김용진 세계실장을 비롯한 실무진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게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되었다. 나도 대통령으로부터 실무진이 작성한 담화문 초안과 긴급 명령안을 받아 보고 서야 비로소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초안을 참고로 하여 긴급히 대통령 담화문을 작성했다.

‘금융실명제 실시합니다’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30분, ‘금융실명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명령’이 대통령의 담화로 발표되었다. 담화문의 효력은 발표와 동시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8시부터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세마을금고 등의 모든 예·적금 통장과 주식, 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 채권 발행의 이자 지급과 상환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 담화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진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 금융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이요, 우리 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YS의 개혁은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와 바로 그날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의 개방을 지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 27일,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직계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3월 4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칼국수’ 오찬석상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단돈 1원을 받지 않았다. 나는 내 임기 동안 그 누구로부터도 딱값은 물론 찾값이라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나는 적어도 YS 자신만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켰다고 믿는다.

YS의 문민 개혁은 그 자신이 즐겨 썼던 대도무문(大道無門)의 호연지기로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졌다. 3월 8일, 권영해 국방장관과의 조찬 자리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교체 의사를 통보하고 곧바로 인선에 착수, 후임자를 청와대로 불러 임명 절차를 마친 뒤 돌아가 즉시 취임식을 갖도록 지시했다. 이야기를 꺼낸 지 4시간 5분 만에 인사조치가 완결된 것이다. 5월 24일에는 12·12사태에 관련된 고위 장성의 예편 조치를 단행했다. 이것이 이른바 ‘5·24 속군’이라는 것이다. 하나회 회원 중 3성 장군 이상 전원과 소장급 일부의 군복을 벗겼는데 이는 군정 종식과 하나회 적결을 향한 발 빠른 행보였다. YS가 취임하고 석 달 만에 군복을 벗은 장군이 18명

이었고, 떨어진 별이 50개에 이르렀다. 정치 군인의 지배하에 있던 군(軍)을 국민의 군대로 바꾸고, 30년 군사 정치 문화를 청산한 것이다.

질풍노도 같았던 문민 개혁

1995년 12월에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12·12사태와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애 세웠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전범을 보여 준 것이다. 4·19를 민주 혁명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하고(1993.7.4), 4·19묘역을 국립묘지, 민주 성지로 성역화(1995.4)하였다. 4·19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게 했으며(1995.7), 문민정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밝혔다. (1993.5.13) 5·18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5·18묘역을 성역화함으로써 한국의 현대사를 바로 세웠다.

한국 민주주의의 긴 도정에서 YS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으로 자신이 앞장서 민주화를 쟁취해 냈고, 마침내 지방 자치의 전면 실시로 그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결하고 정착시켰다. 그는 군사 쿠데타 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장애를 제거해 준 한국 민주주의의 거산(巨山)이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그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

기 고

해조류산업,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군은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24일 동안 열릴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조류 박람회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해조류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해조류를 원료로 한 신상품, 신문물 전람(展覽)의 장이며, 대한민국 수산업의 4차 산업 혁명을 체감하는 장(場)이기도 하다. 완도군은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개

최된 두 번의 박람회가 해조류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면서 정부의 수산업 관련 정책 홍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2017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는 대통령 탄핵, 사드 갈등, 메르스 사태 등 국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목표 관람객 60만 명을 훨씬 넘는 93만여 명을 유치하였고, 수출 계약 5230만 달러와 수출 상품 2900만 달러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2017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1421억여 원, 부가 가치 유발 593억여 원과 2156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완도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해조류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등 사회·문화적 효과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완도군의 해조류 수출 실적은

2014년 209억 원에서 2017년에는 276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국제 박람회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국가의 자존심을 찾은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해조류 상품은 ‘노리’(Nori), ‘와까메’(Wakame), ‘곰부’(Kombu)등 일본식 영문 표기를 달고 수출해 왔으나 완도군이 주도하여 ‘김’(KIM), ‘미역’(Miyook), ‘다시마’(Dasima), ‘뽕’(Tot) 등 한글식 영문 표기를 하고 해외 시장에 유통시키는 성과도 올렸다. 위와 같은 정성적, 정량적 지표에서 나타나듯 해조류 박람회의 지속 개최 필요성은 명확하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없이 5만 3000 완도 군민들의 열정과 희생만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조류는 식용, 식품으로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뷰티, 의약품 등 비식용 분야에서 미래 자원으로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적 육성 전략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해조류 산업의 선도 국가 지위 및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해조류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국가 발전을 위한 균형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21 완도 해조류 박람회는 국민 건강 증진,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 치유 산업과 연계해 개최할 계획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수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완도군이 두 번의 박람회를 개최해 일궈 놓은 해조류 산업의 토대가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청춘 특·특

수험생이 마지막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장소희
동신대 융합정보보안전공 2학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길게는 12년을 준비했던 시험이 끝났건만 대학 입시는 끝나지 않았다. 어떤 수험생에게는 지금부터가 자신이 다닌 대학을 평가할 중요한 시기일지 모른다.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느껴보지 못한 채 면접과 논술 준비를 위해 서울이나 지역 어느 유명 학원에서 기출·예상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수시를 통해 가고 싶은 대학에 합

격한 수험생에게는 수능의 끝이 곧 길고 길었던 대학 입시의 끝이다. 그리고 내년 3월 대학 캠퍼스를 밟기 전까지, 두 달 반이라는 여태껏 누려보지 못한 자유의 시간을 갑자기 마주하게 된다. 아무런 계획 없이 흘러보낸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학창 시절 마지막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분명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다. 최근 한 기관이 발표한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라는 설문 조사에 수험생들은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이유로 용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무려 88.2%(복수응답)나 됐다. 대학 2년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공감하면서도 안타까운 결과였다. 입시라는 세상에서 갓 탈출한 열아홉 살들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용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라니.

좋다.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를 하자. 다만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용돈과 생활비라는 막연한 이유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피트니스 클럽을 끊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거나, 운전면허를 딴다거나, 이 모든 게 사치 같아 싶다면 대학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 시험도 추천한다. 조금 더 세세한 계획이면 어떨까. 수험생 할인도 있겠다. 여행을 가는 길에 해외 여행을 가보자. 운동을 시작한 길에 멋진 몸매의 ‘인증샷’을 남겨 보자. 장롱 면허로 처박아 두지 않기 위해 부모님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 보자. 자격증을 따고 전공 관련 책도 세 권 이상 읽어 보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계획은 구체적인

고 분명할 때 보다 목표와 가까워진다. 수험생, 아니 예비 대학생들에게 올 겨울은 또 다른 시작점일 수 있다. 대학생이 되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포함해 길게는 다섯 달의 개인 시간이 주어진 다. 올 겨울의 두 배나 되는 시간이다. 학창시절처럼 그 시간을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책임 져 주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과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친구와 친구, 동기와 동기, 선배와 후배, 연인 사이마저도 격차가 생겨난다. 습관은 중요하며 때론 무섭다. 오죽하면 세 살 버릇을 못 고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새로운 인생 2막의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험생들이 마음껏 알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길 바란다. 구체적인 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社 說

‘광주형 일자리’ 난항 그래도 포기할 순 없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과 현대차의 투자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은 지난 13일 최종 합의를 마련, 당초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15일까지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차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단과 현대차는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는 주 44시간과 평균 연봉 3500만 원을 문서화해 협약서에 곧 박자’는 입장인 반면 협상단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3500만 원’이나 ‘주 40시간만 명시하고 생산직 초임은 3000만~4000만 원으로 범위를 넓힌 다음 추후 확정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5년간 임금·단체 협상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단과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산 국회’ 파행 언제까지 민생 외면할 건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 선 것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극명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등 고용 세습 의혹 국정 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기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소위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자칫하면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처리에 다툼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마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제도 개선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불모로 한 여야의 무책임한 정쟁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되고 정치 불신도 더욱 커지게 된다. 여야는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밤에 몰래 군사를 다시 진격시켜 성 밖에서 비격진전뢰(飛擧鎗天雷)를 성안으로 발사하여 진안에 떨어뜨렸다. 적이 그 제도를 몰랐으므로 다투어 구경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며 만져 보는 중에 조금 있다가 포가 그 속에서 터지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쇠조각이 별처럼 부서져 나갔다...” 선조25년(1592년) 음력 9월 1일 자 ‘선조 수정실록’ 기사에는 조선군의 비밀 병기가 등장한다. 경상좌병사 박진이 지휘하는 조선군은 왜군이 점령한 경주성을 탈환하려 시도했다. 이때 선보인 무기가 ‘비격진전뢰’였다. 왜

폭발시켜 구형 탄환을 멀리 보내 대상을 격파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비격진전뢰는 포신이 짧고 구경이 큰 ‘대완구’라는 포로 발사해 일정시간 후 폭발, 내부 쇠조각을 비산시키는 폭탄이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비격진전뢰 외에도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전선에 철갑을 씌운 돌격선 ‘거북선’을 비롯해 종래의 화차(火車)를 개량해 승자총통 40여 문을 장착한 ‘변이중 화차’가 있었다. 이러한 신병기는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최근 고창군 무장을성(고창군 무장면에 위치한 성곽) 동쪽 성벽 근처 근기고터에서 비격진전뢰 11점이 발굴됐다. 모양은 지름 21cm의 구형이고, 무게는 17~18kg이다.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유물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군이 무장읍성에 입성할 당시 관군이 도망가면서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때 무장읍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120여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발굴된 조선의 무기는 격동의 구한말 역사에 대한 무한한 상상을 펼치게 만든다. /송기동 편집부작가·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역(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매 세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